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4/12/4 통권 1704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종합부동산세,  
12월 16일까지 납부하세요

###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리스크 관리 실패 사례의 교훈
- 유형자산의 진부화 등에 따른 감액·폐기처분시의 회계세무처리 방법
- 2024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6일까지 납부하세요
- 연말정산 공제 증빙자료를 국세청이 일괄 배달해드립니다
- 서민은 외면, 자기 배만 불리는 오너일가 세무조사
- 비상장회사의 증권 매출과 관련한 유의사항 안내

###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태양광 전기발전사업을 하는 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함 (p.12)

###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税計·經營 戰略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의 구분기준>

구분,개념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구분이유	중소기업기본법 : 정부가 조세특례법이나, 재정 관련 법 등으로 중소기업 육성 지원 목적			
독립성 기준	독립기준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에 속한 자회사, 계열사는 해당안됨(30% 지분여부로 판단)			대기업
자산기준	5천억원 미만	5천억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천억원 이상 5조원 미만</li> <li>상호출자 제한기업 아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산이 GDP의 0.5% 이상 (약 10조원 이상)</li> <li>공정위 상호출자제한 지정기업</li> <li>금융보험업 등</li> </ul>
매출기준				
6개 제조업 (금속 등)	120억원 이하 등	1500억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기준에 해당안된 경우 (매출기준액 초과되는 경우)</li> <li>연매출 7천억원 이하</li> </ul>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준 초과기업 (별도지정)
12개 제조업 (식품 등)	80억원 이하 등	1000억원 이하		
운수·창고, 통신 등	50억원 이하 등	800억원 이하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등	600억원 이하		
음식숙박 등	10억원 이하 등	400억원 이하		
기준시점	매년 4월 1일 기준, 매출은 최근, 3년평균(매출초과해도 5년유예 적용)			

(안세회계법인대표이사 박윤중공인회계사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 (AnSe consulting)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 주 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704호 / 주간 49호

2024. 12. 4. (수)

·발 행 인:이윤선  
·제 작:(주)안건조세정보  
·대표전화:(02) 829-7575  
FAX:(02) 718-8565

## 목 차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카스
-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의 구분기준	표지
CEO의 경영산책	리스크 관리 실패 사례의 교훈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자산대체 5년 후 자산관련 비용 회계처리 질의 - 직원 격려금 지급 시 회계처리 문의 - 위탁판매수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서류 - (상증법 46조 8호) 장애인을 보험금수령인으로 하는 법정보험금의 범위 - 해외고객사에서 소정의 물류비 지원시 부가세 신고 여부 문의	5 6
눈에 맞는 절세미인	유형자산의 진부화 등에 따른 감액·폐기·처분시의 회계세무처리 방법	7
매일 절세재무요점	- 퇴직급여 종류와 퇴직급여 수령액 - 연금저축과 IRP 차이점	10 11
직장인 Survival	상대의 성격에 따른 설득법 6가지 ④	12
최신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1호 (분양권에 한정)·제8호·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 (사전법규소득-816, 2024.01.15) - 태양광 전기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함 (서면법규법인-2120, 2024.04.22)	13 14
세정뉴스와 해설	정부, '유류세 한시적 인하' 내년 2월까지 연장	15
마케팅 Tax consulting	태양광 전기발전사업을 하는 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시 통합 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함	
세무정보	- 2024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6일까지 납부하세요 - 연말정산 공제 증빙자료를 국세청이 일괄 배달해드립니다 - 서민은 외면, 자기 배만 불리는 오너일가세무조사	16 33 35
회계정보	- 비상장회사의 증권 매출과 관련한 유의사항 안내	45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9

# 리스크 관리 실패 사례의 교훈



이재권 안세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자문센터장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CIA

한국윤리경영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현), 서강대 내부감사전문과정 교육운영위원  
서울시립대, 국립 한밭대 겸임교수,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한국경영교육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민관협의회 공정신뢰분과위원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RS( Enterprise Risk Services) 부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정보기술연구위원장  
Touche Ross Australia, Melbourne : Advanced Technology Group 근무

기업의 경영의사결정은 리스크를 수반하게 된다. 리스크 관리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적절한 시점에 리스크를 수용하거나 회피하는 등 적절한 대응조치가 중요하다.

## 리스크 관리(risk treatment)의 목적

리스크 관리를 하는 목적은 조직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리스크를 찾아내 그 리스크가 현재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 조치를 함으로써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 단계에서 리스크를 인식하고 리스크를 평가 분석하여 리스크 관리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으면 리스크 관리 정책에 따라 구체적으로 리스크를 관리(risk treatment)한다.

## 리스크 관리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리스크 관리는 리스크 관리 현장 책임자 또는 리스크관리 전담부서가 독단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우선 리스크 관리 현장 책임자와 리스크관리 전담부서간에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며 더불어 주주, 최고경영층 및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조직에 새로 리스크관리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더욱 중요하다.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실시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사전에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공감될 때 비로소 현장 책임자들의 자발적 참여하에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리스크 관리 전담부서는 리스크 관리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리스크 관리 전담부서는 자기 조직의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 식별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가 1차적인 이해관계자가 될 것이며 상위 감독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 또는 감독기관도 이해관계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조직은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통하여 리스크 성향(risk appetite)을 파악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대주주 또는 최고경영자가 공격적인 경영을 추구할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리스크 관리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기관의 감독정책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감독기관의 엄정한 감독을 받는 금융회사, 제약회사, 교육기관, 병원, 공공기관, 공기업, 방사능 등 위험물질을 다루는 기관 등의 경우에는 감독기관이 제시하는 리스크 관리 기준을 충실히 반영하여 리스크 관리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현장 리스크 관리 책임자와 리스크 관리 전담조직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리스크 인식과 리스크 평가 및 통제활동 결정은 리스크 관리 전담조직의 지휘 하에 현장 리스크 관리 책임자가 구체적으로 시행하므로 이들의 호흡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리스크 관리 전담조직은 수시로 현장 리스크 관리 책임자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리스크 관리 필요성과 리스크 관리의 구체적인 절차를 충분히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 또한 리스크 관리 실무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리스크 사건이 빠짐없이 리스크 관리 전담조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이러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리스크 관리 전담 조직은 조직 전체적인 입장에서 리스크 관리 정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 리스크 대응 조치의 종류

리스크 대응조치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나누고 있다.

- ① 리스크 수용(accept) : 특별한 리스크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현재의 통제활동이 효과적이어서 추가적인 통제활동을 취하지 않아도 현재의 리스크 성향(risk appetite)에 부합하게 리스크가 관리되는 경우이다. 이것은 대부분 低위험 리스크에서 선택하게 된다.
- ② 리스크 회피(avoid) : 리스크가 너무 크거나 적절한 통제활동을 찾을 수가 없어서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다. 기존 공장 폐쇄, 신규시장 진출을 중단하거나 신상품 출시를 유보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최근 공급 과잉과 해외 저가 철강재 공세 등으로 악화하는 수익성을 개선하고 효율화를 이루기 위한 포스코의 선재공장의 폐쇄.
- ③ 리스크 추구(pursue) : 리스크를 증가시켜 더 큰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프로젝트의 추진, 신제품 출시이나 신규 서비스 제공등의 경영전략에서 선택될 수 있다. 예를 들면, SK하이닉스의 HBM의 선제적 투자에 의한 시장이 선점.
- ④ 리스크 감축(reduce) : 현재의 총위험을 줄이는 쪽으로 통제활동을 추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리스크 대응 조치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선택안이다.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이를 발생가능성을 감축하는 방안과 영향도를 감축하는 방안으로 나누기도 한다.

예들 들면, 저축은행의 부동산 PF부실에 대응한 엄격한 사업성심사와 모니터링 등 제품의 품질불량을 Zero화 하기 위한 내외부품질 인증의 엄격한 준수.

- ⑤ 리스크 전가(transfer) : 리스크를 다른 조직에 이전시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전가 수단은 해당 업무의 아웃소싱, 보험 가입이며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헤징을 위한 파생금융상품 거래이다. 예들 들면, 제조업의 화재에 대처하기 위한 충분한 보험 가입.

## 리스크 관리의 실패 사례의 교훈

중소기업의 경우, 리스크 대응조치에 대한 의사결정은 최종적으로 CEO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리스크 관리의 실패를 줄이기 위한 교훈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라.

CEO의 독단적 경영이나 판단은 기업에 치명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가 서로 완벽하지 못한 것을 서로 인정하고 용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집합적 지성을 활용하여 보다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2. 중요한 의사결정은 다양한 의견 수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들어라.

중요한 의사결정일 경우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내외부전문가도 의사결정에 참여시켜 집단사고와 편견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여야 한다. 최근 새로운 전략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는 레드팀(red team)을 구성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레드팀의 결과가 의사결정자의 잘못을 지적하는 등 의사결정자의 자존심 문제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의사결정자는 레드팀의 쓴 소리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3. CEO의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마음가짐은 리스크 관리의 성공적 운영의 관건이 된다.

우리 모두 태생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이다.경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자신의 결점에 대해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CEO도 신이 아닌 인간이다. ‘나’ 자신 역시 틀릴 수 있음을 열어놓아야 상황과 조건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볼수 있다.

## 자산대체 5년 후 자산관련 비용 회계처리 질의

**Q** 본원 a건물은 건설 공사가 2018년에 완공되어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 사용 중입니다.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사용을 시작한 2018년에 자산 인식을 하고 그때부터 감가상각 중 입니다. 2024년에 사용승인을 받기위해 외부 업체에 사용승인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용역비를 납부할 계획입니다.

질의) 자산인식을 2018년에 하고 해당연도부터 건물을 사용중인데, 2024년에 사용승인 용역비를 a건물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질의) 만약 2018년에 취득한 건물에 대해 자본적지출이 아닌 사용승인용역비를 추가로 취득가액에 합산한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A**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된 원가는 취득가액에 가산하게 되는데, 귀사의 경우 이미 가동되고 있는 상태라면 추가적인 사용승인 관련 용역비는 취득원가로 추가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 직원 격려금 지급 시 회계처리 문의

**Q** 회사에서 안전사고 무재해 달성 시 직원들에게 일정금액의 격려금을 지급하고자 하며, 격려금에 대해서는 각 직원의 소득에 포함시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비 정기적 격려금 성격의 금액을 회계처리할 때 소득처분만 정상적으로 할 경우 급여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상관없나요?

**A** 비정기적 격려금 성격의 금액이라도 근로의 제공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세무상으로는 근로소득(급여)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위탁판매수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서류

**Q** 위탁판매수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시 제출해야하는 근거서류에 대해서 법률에 근거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위탁판매수출이 대행수출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대행수출의 경우 수출실적명세서나 영세율매출명세서가 영세율매출 입증서류가 됩니다.

## (상증법 46조 8호) 장애인을 보험금수령인으로 하는 법정보험금의 범위

**Q**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하는 법정보험의 보험금의 경우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에 대하여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상증법 46조 8호, 동법 시행령 35조 6항) 이때, 당해 보험이 보장성 보험만 해당하는 것인지, 저축성 보험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문의드립니다.

**A**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은 증여세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저축성보험 및 보장성보험의 구분을 두지 않았으므로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모든 보험금이면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 해외고객사에서 소정의 물류비 지원시 부가세 신고 여부 문의

**Q** 해외 고객사에서 세계유가 급등에 따른 보상으로 소정의 항공운임비를 입금을 해줬습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대상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귀사의 의견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성 금액이 아닌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유류대 인상에 따른 항공운임비 지원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유형자산의 진부화 등에 따른 감액·폐기·처분시의 회계세무처리 방법

상담실 백종훈 차장

자산에 있어 가치의 감소는 물질적 또는 물리적 요인에 기인한다. 따라서 재고자산의 경우는 손상과 변색 등의 물질적 원인에 의해서 자산가치가 감소하며, 건물·기계 등의 유형고정자산은 실제 사용과 시간 경과에 의해서 가치 감소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물질적으로는 아무런 가치의 감소가 없어도 유행에 뒤지거나 비효율 등의 원인에 의해서 자산의 가치를 감소시켜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것을 자산의 진부화라고 한다.

급격한 기술혁신 등의 영향으로 근래에는 자산이 진부화되는 빈도수가 증가하였는바, 이러한 원인에 의해 자산의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또는 아예 자산을 폐기하는 경우의 세무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 유형자산의 감액손실

기업환경의 변화나 규제 등의 영향으로 유형자산의 효용이 감소하거나 시장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하는 등 유형자산의 진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한 장부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해당 유형자산의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회수가능금액을 장부가액으로 반영하고 원래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감액손실로 처리하면 된다.

기업회계상 감액손실을 인식한 경우에는 감액을 초래한 상황의 변화나 내용을 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기재하고 감액손실의 평가에 사용된 회수가능금액의 산정방법과 그 금액을 공시하면 된다.

① 유형자산을 10만원에 취득시 회계처리

차) 유형자산	100,000	대) 현금	100,000
---------	---------	-------	---------

② 유형자산의 진부화 등으로 회수가능금액이 6만원이 된 경우

차) 유형자산감액손실	40,000	대) 감액손실누계액	40,000
-------------	--------	------------	--------

\* 감액손실 = 장부가액 - 회수가능금액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회수가능금액

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유형자산의 평가를 인정하지 않는바, 기업이 유형자산 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이를 부인하여 유보 처분하였다가 감액손실이 환입되거나 처분되었을 때 유보처분된 금액을 사후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법인세법에서도 천재·지변·화재, 법령에 의한 수용 등의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고정자산에 한해 시가와 장부가과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바, 이렇게 계상된 감액손실은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세무조정하게 된다.

## 유형자산을 폐기하는 경우의 세무회계처리 방법

많은 사람들이 폐기와 처분에 대해 “폐기처분”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정확히는 “폐기 및 처분”이라고 구분해서 사용하여야 하며, 세무상·회계상의 처리방법도 다르다.

즉, ‘폐기’라 함은 해당 유형 자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버린다는 의미이나, 아직까지는 기업의 내부에 해당 유형 자산을 소지한 상태이므로, 추후 매각 등의 경우에 대비해 비망가액을 남기는 처리를 해야 한다.

따라서 유형자산이 진부화되어 ‘폐기’ 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중 비망가액(1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폐기손실로 회계처리 하면 된다.

◇ 장부가 1천만원, 감가상각누계액 8백만원인 자산을 폐기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차) 감가상각누계액	8,000,000	대) 유형자산	9,999,000
유형자산폐기손실	1,999,000		(비망가액 1천원 남기고 장부에서 없앴)

유형자산을 폐기,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폐기자산의 사진, 내부품의서, 감가상각대장 사본(취득 원가, 충당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추후 해당 처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 유형자산 처분시의 세무회계처리 방법

유형자산이 진부화되어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이란 해당 자산을 유·무상으로 외부에 유출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산을 폐기와 동시에 처분하는 경우와, ② 폐기되어 장부상 비망가액만 남겨져 있는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이처럼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경우는 유형자산의 폐기와 똑같이 해당 자산을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하는데 이때에는 비망가액은 남기지 않는다.

또한 폐기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은 폐기손실, 처분손실 등의 영업외손익으로 반영하여 처리하면 된다.

물론, 유형자산의 처분이나 영구적 폐기의 경우에도 해당 자산의 사진, 내부품의서, 감가상각대장 사본 등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

실도 자산의 처분일이나 영구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유형자산의 처분에 따른 사례별 회계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사례1] 장부가 1천만원, 감가상각누계액 8백만원인 자산을 폐기처분(소각)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차) 감가상각누계액	8,000,000	대) 유형자산	10,000,000	
유형자산폐기손실	2,000,000			
[사례2] 장부가 1천만원, 감가상각누계액 8백만원인 자산을 1백만원에 매각처분시의 회계처리				
차) 현금	1,000,000	대) 유형자산	1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8,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000			
[사례3] 이미 폐기되어 비망가액만 남아 있는 자산의 소각(폐기처분)시의 회계처리				
차) 유형자산폐기손실	1,000	대) 유형자산	1,000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1월 22일 (금)	11월 25일 (월)	11월 26일 (화)	11월 27일 (수)	11월 28일 (목)
미	달	러	(USD)	1398.10	1400.50	1398.20	1401.20	1396.80
일	본	엔	(JPY)	906.00	907.62	908.13	915.01	925.31
영	국	파	운 드	(GBP)	1759.86	1762.60	1757.61	1761.66
캐	나	다	달 러	(CAD)	1000.39	1004.55	999.79	997.12
홍	콩	달	러	(HKD)	179.63	179.93	179.66	180.04
중	국	원	(CNH)	192.85	192.98	192.77	193.16	192.36
유	로	화	(EUR)	1464.51	1467.23	1467.83	1469.93	1476.21
호	주	달	러	(AUD)	910.09	916.21	909.60	907.49
싱	가	폴	달 러	(SGD)	1038.59	1042.74	1039.01	1040.31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313.12	313.49	314.06	314.35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 퇴직급여 종류와 퇴직급여 수령액

퇴직급여 종류		퇴직급여 수령액
퇴직금		퇴직이전 30일분 평균임금×계속근로기간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DB형)	퇴직이전 30일분 평균임금×계속근로기간
	확정기여형 (DC형)	회사 부담금(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 + 운용수익



## 퇴직급여와 근속연수에 따른 예상 퇴직소득세

퇴직급여	근속연수			
	5년	10년	20년	30년
5000만	236만	75만	-	-
1억	1036만	426만	123만	26만
2억	3571만	1966만	773만	380만
3억	6392만	4289만	1984만	1085만



## 연금저축과 IRP 차이점

구분	연금저축	IRP
가입대상	누구나 가입 가능	소득이 있는 직장인, 자영업자 등
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	900만 원(연금저축 600만원 포함)
세액공제율	5500만 원 이하:15%	5500만 원 이하:15%
	5500만 원 초과:12%	5500만 원 초과:12%
투자대상과 투자 한도	투자대상과 비율에 제한 없음	위험형 자산: 최대 70%
		안전형 자산: 최소 30%
중도인출	비교적 자유로움	법에 정해진 사유만 가능
금융기관	은행, 증권, 보험	은행, 증권



## 가상자산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 유형	종합소득 중 기타소득
과세 대상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소득 계산방법	양도가액 - 취득가액 - 부대비용(거래 수수료)
과세 방법	기본공제 250만원, 세율 22%(지방세 포함), 분리과세
신고 및 납부	연 1회(다음 연도 5월 1~ 31일)



## 상대의 성격에 따른 설득법 6가지 ④

### 4. 권위주인적인 사람

#### - 직함을 내밀어라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굽실거리고, 아랫사람에게는 방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 권위에는 바로 복종하는데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는 절대 귀를 빌려주지 않는 타입이다.

이런 권위주의적인 사람은 설득하기가 매우 어렵다.

권위주의적인 사람을 설득하려면 먼저 그들이 직함에 약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메시지 내용 자체보다는 상대방의 권위에 쉽게 굴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사장이 이렇게 말했다"거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에 따르면"이라는 식으로 자신의 의견에 충분히 권위를 부여하면 그 내용을 의심없이 받아들인다.

# 최 신 판 례 예 규

## Marketing Tax consulting

태양광 전기발전사업을 하는 법인이 태양광 발전 설비에 투자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함

태양광 전기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 세액공제 가능함

서면법규법인-2120, 2024.04.22

### Ⅰ 질 의

- ◇◇태양광발전소는 2020.12.1. 개업하여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전력 생산 및 판매를 위해 2021.4.23.부터 2021.6.7.까지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였음

질의

-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 Ⅰ 회 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23사업연도부터 미환류소득 법인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에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이 있는 경우 '23사업연도 신고 방법 → '23사업연도에 발생한 초과환류액과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상계하여 「과세대상 미환류소득」을 산출함

사전법규법인-890, 2024.04.02

### Ⅰ 질 의

- 조특법 개정으로 '23사업연도부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내국법인에,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이 있는 경우 '23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방법

### Ⅰ 회 신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의 해석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3-법규법인-2496, 2023.11.17.

「조세특례제한법」이 법률 제19199호(2022.12.31.)로 개정됨에 따라 제100조의32 제1항의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용한 차기환류적립금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을 차감한 잔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임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1호(분양권에 한정)·제8호·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

사전법규소득-816, 2024.01.15

#### ■ 질 의

- 부동산매매업자가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지 1년 이내의 양도한 후, 매매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세율적용방법

#### ■ 회 신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6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1호(분양권에 한정)·제8호·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사망을 원인으로 탈퇴하고 해당 출자지분을 조합원인 상속인이 승계받는 경우, 상속받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사전법규재산-543, 2023.12.14

#### ■ 질 의

-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사망을 원인으로 탈퇴하고 해당 출자지분을 조합원인 직계비속이 승계하는 경우, 상속받는 출자지분을 보충적 평가방법(상증법 63, 상증령 54)이 아닌 조합법인 탈퇴시 반환받을 출자지분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

#### ■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사망을 원인으로 탈퇴하고 해당 출자지분을 조합원인 상속인이 승계받는 경우, 상속받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말하는 "농·어민"이란 "농·어업에 종사함으로써 생계를 영위해 나가는 자"를 의미함

소득세제과-1138, 2023.12.21

#### ■ 질 의

-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적용 시 '농·어민'의 범위

#### ■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제9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어업에 종사함으로써 생계를 영위해 나가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정부, '유류세 한시적 인하' 내년 2월까지 연장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두달간 연장한다.

최상목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서민 유류세 부담 완화를 위해 2개월 인하조치를 연장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2월까지 인하 조치가 연장되니 유류세 올라갈 걱정은 안 해도 된다"며 "고유가 (상황에서)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있어 유류세 부담 완화에 도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에너지 공기업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 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 6개월 연장한다"며 "아무래도 전기요금 인하 상황에서 (원가부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했다.

기재부는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한시적 인하에 나섰고 이후 연장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월에도 12번째 연장이 이뤄졌다. 다만 단계적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인하율을 낮춰 현재 휘발유는 1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는 23%의 유류세 인하율을 적용받고 있다.

###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야 신경전 팽팽... 기재위 전체회의도 무산

26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예정됐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무산됐다.

전날 개최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소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 논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날 해당 사안을 놓고 재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결국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논의가 보류되면서 이날 예정됐던 기재위 전체회의가 무산된 것이다.

이처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가상자산 소득에서 연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22%를 분리과세 하는 제도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아직 과세 인프라가 미비하고 청년층에 자산 형성 기회를 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가상

자산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면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

결국 양측은 이날까지 입장차를 좁히는데 실패했고, 관련 협상은 추후로 연기됐다.

앞서 지난 19일에도 여야는 조세서위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안들을 논의했으나 이견 차이를 보이며 관련 논의가 보류됐다.

기재위 관계자는 "민주당은 즉시 과세를, 국민의힘은 2년 유예를 주장했으나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보류됐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무산... '현행 유지'로 가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6일 조세소위원회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했으나 여야합의로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9일 열리는 기재위 조세소위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특법 정부안이 빠진 채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재부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가 무산될 경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액공제 금액의 50%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 기재위에서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 축소에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무신고를 할 때 전자신고로 하면 1인당 1~2만원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해당 세목의 전자신고율이 모두 90%대 후반에 달해 전자신고가 정착됐다며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포함했다.

이 법안은 납세자의 전자신고가 세정당국의 신고서 입력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전자신고를 하는 납세자에게 전가된 납세협력비용이라면 이를 충실하게 보전하여 항구적으로 지원하고 영세사업자에게는 지원을 더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2024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6일까지 납부하세요

- 국세청, 2024. 11

- (54.8만 명 5.0조 원)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 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11.25일(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6일(월)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 및 세액은 총 54.8만 명, 5.0조 원으로 종부세 인원·세액이 크게 감소하였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 \* ('22년) 131만 명, 7.5조 원 → ('23년) 50만 명, 4.7조 원 → ('24년) 54.8만 명, 5.0조 원
- 총 고지 인원 및 세액 54.8만 명, 5.0조 원 중에서 주택분은 46만 명, 1조 6천억 원이며 토지분은 11만 명, 3조 4천억 원입니다.
- (분납 신청)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 (납부유예 신청)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9천 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홈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 납부 개요

- (납부 대상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자산	공제액
• 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
•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80억 원

\* 일반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경우는 공제액 0원

- (납부 안내)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주택분 46만 명(세액 1.6조)과 토지분 11만 명(세액 3.4조), 총 54.8만 명(세액 5.0조)에게 11.25일부터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 12.16.(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24년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 및 세액 |

구 분	인원(만 명)					세액(조 원)				
	'22년	'23년	'24년	23 대비 증감	22 대비 증감	'22년	'23년	'24년	23 대비 증감	22 대비 증감
합 계	131	50	55	5	△76	7.5	4.7	5.0	0.3	△2.5
주 택	122	41	46	5 (12%)	△76 (△62%)	4.1	1.5	1.6	0.1 (6.7%)	△2.5 (△61%)
토 지	12	11	11	0 (-)	△1 (△83%)	3.4	3.2	3.4	0.2 (6.3%)	△0.0 (-)

\* 합계인원은 주택분과 토지분 중복인원 제외

-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12월 16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 (납부 방법)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24.12.16.(월)까지며,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고지서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 (홈택스) 홈택스 > 납부·고지·환급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손택스) 손택스 앱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2 분납 신청

- (개요)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 금액을 '25.6.16.(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분납 가능 금액
• 300만 원 초과 600만 원 이하	납부할 세액 - 300만 원
• 600만 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 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 신청 됨

### ◆ 분납 신청 사례

당초 고지세액*	'24.12.16.까지 납부할 금액	'25.6.16.까지 납부할 금액 (= 분납 신청한 금액)
4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800만 원	800만 원 - 분납 신청한 금액	400만 원 이하 금액

\* 사례의 고지세액 등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금액임

- (신청 방법)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12.16.(월)까지 분납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납부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 (홈택스) 홈택스 > (하단)자주 찾는 메뉴 > 종합부동산세 >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 (손택스) 손택스 앱 > 세금관련 신청/신고 >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 (분납 기간) 분납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후 '25.6.16.(월)까지이며, 분납 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납부 방법)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 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또한 6개월 후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따라 분납 신청 금액을 납부할 수 있으며, 분납 기간 중에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 3 납부유예 신청

- ☐ (개요)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는 아래의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도·상속·증여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납부유예 신청 요건

- ①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 포함)
- ② 만 60세 이상 이거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 ③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
- ④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 원 초과

- ☐ (신청 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납부유예 신청을 하고,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유예 신청서·납세담보제공서 및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홈택스) 홈택스 > (하단) 자주 찾는 메뉴 > 종합부동산세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 \* (손택스) 손택스 앱 > 세금관련 신청/신고 >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 ☐ (신청 기한) 납부유예 신청 기한은 납부기한 3일 전(12.13.)까지이며, 제출서류 검토 후 납부기한(12.16.)까지 허가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 ☐ (납세 담보) 납부유예 신청 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담보의 종류 및 필요 서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담보의 종류	필요서류 및 준비물
토지·건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부
금전·유가증권	공탁수령증
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	보험증권, 납세보증서

\*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화재보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 (납부 사유) 납부유예 허가 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부유예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24년 기준 연 3.5%)을 납부해야 합니다.



## ◆ 납부 사유

- ①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 ②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③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된 경우
- ④ 담보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⑤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⑥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 4

## 신고·납부

- (신고)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12.1.~12.16.)동안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고지세액은 자동 취소됩니다.
  - 또한, 당초 합산배제·특례를 신고(신청) 하지 못한 납세자도 합산배제·특례를 신고(신청)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 다만, 자진 신고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하므로 법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도움) 홈택스 전자신고 시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신고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조회 서비스) 납부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산출 근거와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 수 및 대표물건 소재지만 기재되어 있으나,
    -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상세한 과세물건 내역 및 세액을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홈택스) 홈택스 > (하단)자주 찾는 메뉴 > 종합부동산세 >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 (손택스) 손택스 앱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신고 >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 (상담)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각종 도움자료를 참조하거나,
    -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1 -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

### << 2023년 주요 개정내용 >>

☐ 주택분 세율 인하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중과세율은 폐지하고 기본세율로 적용하고,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구간은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동일

과세표준	기본세율		중과세율	
	'22년 (일반 1~2주택)	'23년 (2주택 이하)	'22년 (3주택 이상, 조정2주택)	'23년 (3주택 이상)
3억 원 이하	0.6%	0.5%	1.2%	0.5%
6억 원 이하	0.8%	0.7%	1.6%	0.7%
12억 원 이하	1.2%	1%	2.2%	1%
25억 원 이하	1.6%	1.3%	3.6%	2%
50억 원 이하		1.5%		3%
94억 원 이하	2.2%	2%	5%	4%
94억 원 초과	3%	2.7%	6%	5%

☐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 일반 납세자의 경우 6억 원 →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 12억 원으로 기본공제금액 상향

구분	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1세대 1주택		개인		법인		
	'22년	'23년	'22년	'23년			
공제금액	11억 원	12억 원	6억 원	9억 원	-	5억 원	80억 원

☐ 주택분 세부담상한율 통일

- 다주택자의 세부담상한율을 300% → 150%으로 인하하여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부담상한율 적용

구분	세부담상한율	
	'22년	'23년
일반 1~2주택	150%	150%
조정2주택, 3주택 이상	300%	
법인	제한없음	제한없음



## &lt;&lt; 2024년 주요 개정내용 &gt;&gt;

## □ 다주택자 중과배제 주택 추가

- 주택분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소형신축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추가

구분	소형 신축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
특례내용	주택분 세율 적용 시 해당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	
전용면적	60㎡ 이하	85㎡ 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6억 원 이하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	(수도권) 적용불가 (수도권 밖) 6억 원 이하
분양주택	「주택법」상 사업주체, 「건축물분양법」상 분양사업자가 분양	
최초계약	해당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최초로 체결하여 취득	
최초입주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해당 주택에 미입주	
취득시기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
기타 요건	2024년 1월 10일 이후 준공, 아파트 제외*	수도권 밖 소재 선착순 공급된 미분양주택

\* 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소형신축주택의 범위에 포함

##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확대

-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공공주택사업자 공급 공공분양주택으로 수분양자는 20년 또는 30년에 걸쳐 지분 분할 취득

-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및 미분양주택 수급 여건 개선을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24.3.28.부터 '25.12.31.까지 직접 취득하는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정

## □ 혼인합가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5년 → 10년)

-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 특례 적용 기간을 혼인한 날부터 10년으로 확대

참고 2 -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방식(개인)

구 분	주택분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																																																																				
Σ 공시가격	Σ 주택 공시가격	Σ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Σ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	-	-	-																																																																				
공제금액	9억 원(1세대1주택자 12억 원)	5억 원	80억 원																																																																				
×	×	×	×																																																																				
공정시장 가액비율	60%	100%	100%																																																																				
=	=	=	=																																																																				
종 부 세 과세표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	×	×																																																																				
세 율(%)	<table><tr><td rowspan="2">과세표준</td><td colspan="2">2주택 이하</td><td colspan="2">3주택 이상</td></tr><tr><td>세율</td><td>누진 공제</td><td>세율</td><td>누진 공제</td></tr><tr><td>3억 원 이하</td><td>0.5</td><td>-</td><td>0.5</td><td>-</td></tr><tr><td>6억 원 이하</td><td>0.7</td><td>60만 원</td><td>0.7</td><td>60만 원</td></tr><tr><td>12억 원 이하</td><td>1.0</td><td>240만 원</td><td>1.0</td><td>240만 원</td></tr><tr><td>25억 원 이하</td><td>1.3</td><td>600만 원</td><td>2.0</td><td>1,440만 원</td></tr><tr><td>50억 원 이하</td><td>1.5</td><td>1,100만 원</td><td>3.0</td><td>3,940만 원</td></tr><tr><td>94억 원 이하</td><td>2.0</td><td>3,600만 원</td><td>4.0</td><td>8,940만 원</td></tr><tr><td>94억 원 초과</td><td>2.7</td><td>10,180만 원</td><td>5.0</td><td>18,340만 원</td></tr></table>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세율	누진 공제	세율	누진 공제	3억 원 이하	0.5	-	0.5	-	6억 원 이하	0.7	60만 원	0.7	60만 원	12억 원 이하	1.0	240만 원	1.0	240만 원	25억 원 이하	1.3	600만 원	2.0	1,440만 원	50억 원 이하	1.5	1,100만 원	3.0	3,940만 원	94억 원 이하	2.0	3,600만 원	4.0	8,940만 원	94억 원 초과	2.7	10,180만 원	5.0	18,340만 원	<table><tr><td>과세표준</td><td>세율</td><td>누진 공제</td></tr><tr><td>15억 원 이하</td><td>1.0</td><td>-</td></tr><tr><td>45억 원 이하</td><td>2.0</td><td>1,500만 원</td></tr><tr><td>45억 원 초과</td><td>3.0</td><td>6,000만 원</td></tr></table>	과세표준	세율	누진 공제	15억 원 이하	1.0	-	45억 원 이하	2.0	1,500만 원	45억 원 초과	3.0	6,000만 원	<table><tr><td>과세표준</td><td>세율</td><td>누진 공제</td></tr><tr><td>200억 원 이하</td><td>0.5</td><td>-</td></tr><tr><td>400억 원 이하</td><td>0.6</td><td>2,000만 원</td></tr><tr><td>400억 원 초과</td><td>0.7</td><td>6,000만 원</td></tr></table>	과세표준	세율	누진 공제	200억 원 이하	0.5	-	400억 원 이하	0.6	2,000만 원	400억 원 초과	0.7	6,000만 원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세율	누진 공제	세율	누진 공제																																																																		
	3억 원 이하	0.5	-	0.5	-																																																																		
	6억 원 이하	0.7	60만 원	0.7	60만 원																																																																		
	12억 원 이하	1.0	240만 원	1.0	240만 원																																																																		
	25억 원 이하	1.3	600만 원	2.0	1,440만 원																																																																		
	50억 원 이하	1.5	1,100만 원	3.0	3,940만 원																																																																		
	94억 원 이하	2.0	3,600만 원	4.0	8,940만 원																																																																		
94억 원 초과	2.7	10,180만 원	5.0	18,340만 원																																																																			
과세표준	세율	누진 공제																																																																					
15억 원 이하	1.0	-																																																																					
45억 원 이하	2.0	1,500만 원																																																																					
45억 원 초과	3.0	6,000만 원																																																																					
과세표준	세율	누진 공제																																																																					
200억 원 이하	0.5	-																																																																					
400억 원 이하	0.6	2,000만 원																																																																					
400억 원 초과	0.7	6,000만 원																																																																					
=	=	=	=																																																																				
종합부동산 세 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	-	-	-																																																																				
공 제 할 재산세액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	=	=	=																																																																				
산출세액	주택분 산출세액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	-	-																																																																				
세액공제(%)	<1세대 1주택> 보유 : 5년(20), 10년(40), 15년(50) 연령 : 60세(20), 65세(30), 70세(40) ☞ 중복적용 가능(한도 8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	-	-																																																																				
세무상 초과세액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 X 150%]을 초과하는 세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	=	=	=																																																																				
납 부 할 세 액	각 과세유형별 세액의 합계액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6개월)]																																																																						





## 참고 3 -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방식(법인)

구 분	주택분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						
Σ 공시가격	Σ 주택 공시가격	Σ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Σ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		-							
공제금액	해당없음	5억 원	80억 원						
x		x							
공정시장 가액비율	60%	100%							
=		=							
중 부 세 과세표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X		X							
세 율(%)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3억 원 이하	2.7	5.0	15억 원 이하	1.0	-	200억 원 이하	0.5	-
	6억 원 이하			45억 원 이하	2.0	1,500만 원	400억 원 이하	0.6	2,000만 원
	12억 원 이하								
	25억 원 이하								
	50억 원 이하			45억 원 초과	3.0	6,000만 원	400억 원 초과	0.7	6,000만 원
	94억 원 이하								
	94억 원 초과								
=		=							
종합부동산세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		-							
공 제 할 재산세액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		=							
산출세액	주택분 산출세액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							
세액공제(%)	해당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							
세액상한 초과세액	해당없음	150% ☞ 과세대상 유형별(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									
납 부 할 세액	각 과세유형별 세액의 합계액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6개월)]								

## 참고 4 - 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 및 납부 관련 Q&A

### Q1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 1차적으로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 ☐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됩니다.

\* 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개별 물건별 과세, 토지는 관내 소재한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

### Q2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 ☐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말합니다.

### Q3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표준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외 단독주택 및 토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합니다.
- ☐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은 4월말에 공시되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또는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Q4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 ☐ 올해는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 다주택자 중과배제 주택으로 추가되었습니다.
- ☐ 또한,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CR리츠가 취득하는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추가)

**Q5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 되는데 주택 수 계산 방법은?**

- ☐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도 주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주택 수 계산은 재산세 과세유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 ☐ 종합부동산세 세율적용 주택 수는 인별(법인·단체 포함)로 전국에 보유하는 주택을 합한 개수입니다.
- ☐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 주택의 일부 지분만 보유한 경우에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세율적용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 ☐ 다만, 과세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세율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며,
- ☐ 상속주택 및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물건을 세율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세율적용 주택 수 계산 사례 >

구 분	주택보유 현황	주택 수
사례 1	· 서울 주택 2호*, 강원 1호 * 2호 중 1호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일반 2주택
사례 2	· 부산 주택 2호 · 강원 주택 1호(부속토지만 소유)	3주택 이상

## Q6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제도란 무엇인지?

- 보유세제의 개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부담의 일시적인 급증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세부담상한은 과세유형별(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각각 150%를 한도로 적용합니다.
- 또한, 과세유형별로 올해 부과된 재산세와 세부담상한 적용 전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이,
  - 직전연도 표준세율 재산세액 및 세부담상한 적용 전 종합부동산세 상당세액 합계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세액은 “0”으로 보는 것입니다.

당해연도 총세액상당액		직 전 연 도 총세액상당액×한도비율
과세유형별 올해 부과된 재산세액과 세부담상한 적용전 종부세액 합계액 ( 재산세 + 종부세 )	≤	과세유형별로 직전연도 표준세율 재산세액과 종부세상당세액 합계액의 일정한도액 (재산세 + 종부세) X 150%

## Q7 과세대상 주택·토지와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 홈택스\*에서 과세대상 물건(주택·토지)과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 \* 홈택스([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 → 로그인 → (하단) 자주 찾는 메뉴 → 종합부동산세 →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과세대상 물건 및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Q8 1주택을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 소유 시 공제액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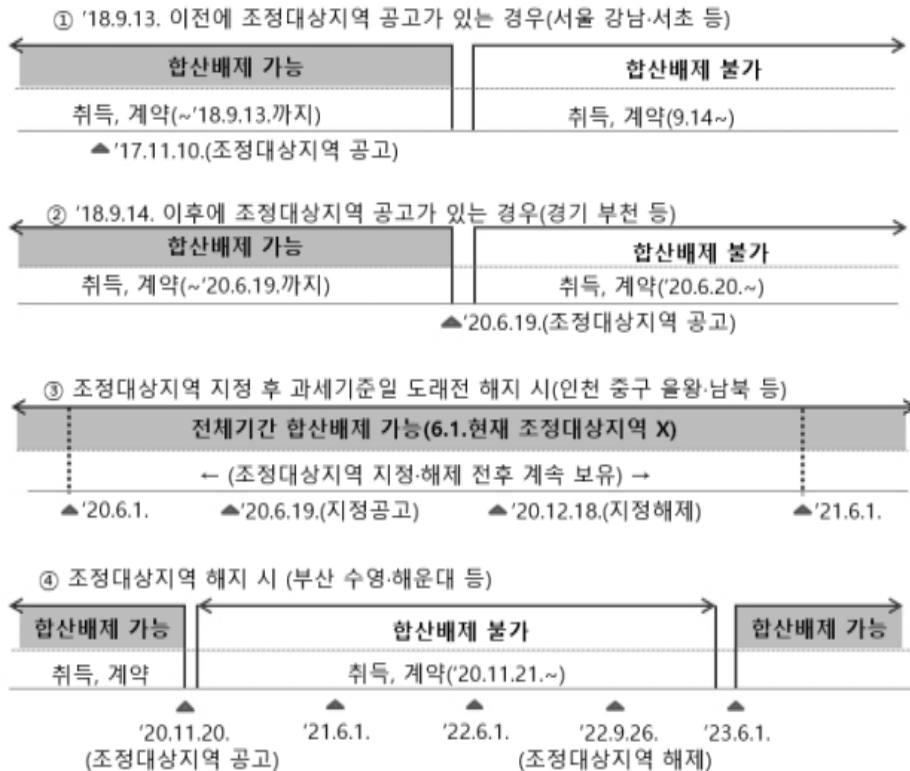
-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며, 각각 9억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특례 신청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어 12억 원 공제 및 보유기간·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9 개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합산배제 가능한지?

-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취득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가 제외(중부세 과세)됩니다.
- 다만, '18.9.13.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합산배제가 적용됩니다.

\*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는 경우는 조정대상지역 공고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 포함



### Q10 조정대상지역 판단기준 및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판정은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전국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고, 서울시 서초구·강남구·송파구·용산구가 '24년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합니다.

**Q11**

**합산배제 및 특례를 신고(신청)기한 내(9.16.~9.30) 신고(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 ☐ 합산배제·특례를 신고(신청)기간 내 신고(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부세 신고기간(12.1.~12.16.)에 추가로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납부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서(신청서)를 제출하고 납부세액을 납부할 경우 고지세액은 자동 취소됩니다.

**Q1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잘못된 경우는?**

- ☐ 합산배제 대상이 아님에도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신고기간(12.1.~12.16.)에 과세대상으로 정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 미신고시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13**

**일정지분을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 ☐ 일정지분을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주택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간 1세대 1주택자로 판정하며, 세율 적용 시에도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 ☐ 상속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이면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Q14**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한 경우 상속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15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도 지방 저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수도권에 소재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대상인 지방 저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도권에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포함됩니다.
- ☐ 다만, 예외적으로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에 소재(경기 연천군, 인천 강화군·옹진군)하는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16

**지방 저가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지방 저가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17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1세대 1주택자 특례 요건을 갖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18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인지?**

- ☐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므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 ☐ 다만, 해당 납세자를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여 기본공제(12억) 및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특례 주택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Q19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방법은?

-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12.13.(금))까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납부유예 신청 후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 ☐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유예 신청서·납세담보제공서 및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담당자가 제출서류 검토 후 납부기한까지 허가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 Q20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관련 서비스 중 인증서가 필요한 것은?

- ☐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서비스 중 인증서 필요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서비스	인증서 필요	
	여	부*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
종합부동산세 납부	○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조회	○	
종합부동산세 신고(미리채움 활용)	○	
종합부동산세 신고(미리채움 미활용)		○

\* 홈택스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한 로그인 필요

### Q21 종합부동산세 전자신고 방법은?

- ☐ 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한 다음 아래\* 접근 경로에 따라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하단)자주 찾는 메뉴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하기
- ☐ 이용 편의를 위해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를 종합부동산세 신고기간에 국세청 누리집(nts.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Q22 어떠한 경우에 고지·납부 대신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 ☐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거나 고지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납부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 Q23 종부세 고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 ☐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거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Q24 고지세액을 12.16.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는?

- ☐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
  - 세액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됩니다.

## Q25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불이익은?

- ☐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10%(부당한 과소신고는 4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과소 신고한 세액에 1일당 0.022%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연말정산 공제 증빙자료를 국세청이 일괄 배달해드립니다

- 국세청, 2024. 11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신청을 '24.11.30.\*까지 받습니다.

\* 1차 신청기한은 '24.11.30.이며 '25.1.10.까지 추가·수정 가능

## | 일괄제공서비스 일정 |

**근로자명단등록**  
~'24.11.30.

회사 → 국세청  
[소속 근로자 명단등록]

**근로자확인(동의)**  
'24.12.1~'25.1.15.

근로자 → 국세청  
[일괄제공신청 내역 및  
자료 제공 확인(동의)]

**자료다운·업로드**  
'25.1.17(1.20.)~3.10.

국세청 → 회사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아 회사 시스템에  
일괄 업로드]

○ 서비스 이용시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업로드 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지난해에는 7만개 회사의 250만 근로자가 편리하게 이용하였고, 연말정산이 집중되는 시기에 시스템 과부하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 이렇게 효율적인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는 '24.11.30.까지 ①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②국세청 제공 엑셀서식 입력 후 업로드 ③직접 입력 방식으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합니다.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 → (회사용)신청·관리

○ 근로자가 '24.12.1.부터 '25.1.15.까지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하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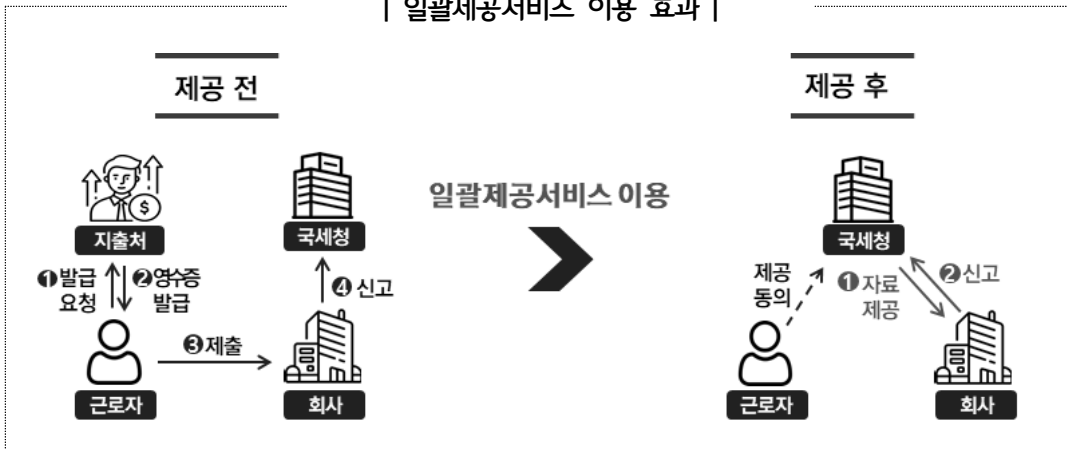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 → (근로자용)조회·동의·취소



- 보다 많은 회사와 근로자가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 기존에는 국세청이 1.20.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자료를 제공했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 회사가 업무 일정에 맞추어 일괄제공 받을 날짜를 1.17.과 1.20.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회사 직원 전체의 연말정산을 단 1~2명의 실무자가 담당하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공제자료를 일찍 받는다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음  
(‘24.5. 유통전문 그룹사 간담회)

### |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효과 |



- 앞으로도 국세청은 신고·납세 도움자료와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서민은 외면, 자기 배만 불리는 오너일가 세무조사

국세청, 2024. 11

## 1 세무조사 추진배경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공정경쟁 및 사회질서 훼손 행위를 통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고의적 탈세자에 대해 일관되게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기조 아래, 이번 세무조사는 ‘투자 > 성장 > 정당한 이익배분’이라는 선순환 구조에 역행하는 일부 기업과 그 사주일가의 일탈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 기업 보유자산과 미공개 기업정보를 이용하여 사주일가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불공정 행태는 소비자, 소상공인, 소액주주 등 서민과 상생하는 건강한 자본주의 체제를 왜곡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 특히, 금번 조사에서는 각종 플랫폼, 프랜차이즈 등 서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 건전한 경제 질서를 저해하며 세금을 회피하는 기업과 그 사주일가의 불공정 이익추구 행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2 세부 추진내용

- 국세청은 사익추구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이익을 독식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탈세혐의자 3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합니다.
- 이번 조사대상 유형은 ①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사용 ② 알짜 일감 몰아주기 등 ③ 미공개 기업정보로 부당이득, 총 3가지입니다.



## I 세무조사 대상 I

합계	①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사용 (고가 부동산·미술품 등)	② 알짜 일감 몰아주기 등 (자녀법인 지원·부당 내부거래)	③ 미공개 기업정보로 부당이득 (IPO, 신규 사업진출 등)
37개	14개	16개	7개

## [유형 1] 회사 자산을 '내 것'처럼 쓰면서 호화생활 : 14개

- 첫 번째 조사 대상은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며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이를 정당한 비용으로 위장하여 세금을 회피한 기업 및 그 사주일가입니다.
- 이번 조사 대상자에는「일반소비자」인 서민을 상대로 얻은 기업 이익으로,
- 해외 호화주택·스포츠카 등 고가의 법인 자산을 취득하여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사주 자녀의 해외 체류비·사치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도덕적 해이' 사례가 다수 포함되었으며,
  - 이들이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있는 재산 규모는 고급 주택·고가 사치품 등 총 1,384억 원입니다.

## ■ 사치성 재산 및 사적비용 부담 내역 (유형1: 14개)

고급주택·별장 등	슈퍼카·요트·미술품 등	사적비용 부담 등
559억 원 (최고가 고급빌라 190억 원 등)	322억 원 (최고가 영국産 대형 세단 9억 원 등)	503억 원 (손자 해외 유학비 12억 원 등)

## I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사용 주요 탈세 사례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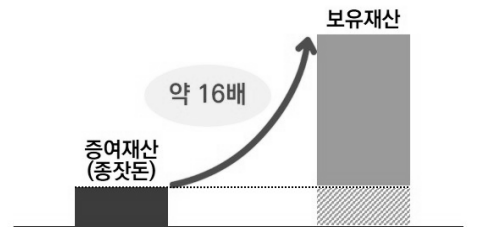
- ① [법인 자산 사익 편취] 법인 자금으로 자산을 취득 후 사주일가 사적 이용
- 해외 유명 휴양지에 법인 명의로 호화 주택 취득 후 사주일가 사용
  - 법인 명의로 고가 미술품을 다수 취득 후 사주가 임차한 개인 수장고에 보관하며 사적 사용
  - 법인 명의 고가 스포츠카, 고급 콘도, 골프 회원권 및 상품권 등을 사적 사용
- ② [사적 비용 법인 부담] 사주 일가의 호화생활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부담
- 사주가 보유한 슈퍼카 수십 대의 튜닝 등 유지·관리 비용 수십 억원을 법인이 부담
  - 사주 손자녀의 해외 사립학교 교육비 및 체류비 수억 원을 법인이 부담
  - 플랫폼 노동자 정산금을 빼돌려 회사 돈으로 개인 별장 짓고 연수원 용도로 위장

## [유형 2] 돈 되는 알짜 일감 ‘아들·딸 회사’에 몰아주기 등 : 16개

- 두 번째 조사 대상은 사주 지분이 많은 계열사나 사주 자녀가 운영하는 법인을 부당 지원하여 거래 이익을 독식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기업 및 사주 일가입니다.
- 이들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경쟁을 통해 얻을 사업기회를 빼앗아,
  - 사주 자녀에게 알짜 사업을 떼어주거나 고수익이 보장된 일감을 밀어주는 방식으로, 사주 자녀에게 ‘재산 증식 기회’를 몰아주며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하였습니다.
- 이번 조사대상 자녀들은 증여 받은 종자돈 평균 66억 원을 시작으로, 부당 지원 등을 통해 5년 만에 재산이 평균 1,036억원(최대 6,020억원)으로 증가하였음에도 세법에서 정하는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 부모소유 기업이 자녀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거래처를 떼어주어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 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4)

### ■ 자녀세대 재산증가 현황 (유형2: 16개)

증여재산 평균(종자돈)	現 보유재산 평균('23년)
66억 원	1,036억 원



### I 알짜 일감 몰아주기 등 주요 탈세 사례 I

- ① [자녀법인 부당지원] 알짜 사업기회나 고수익 일감 밀어주기 등으로 부당지원
  - 자녀법인이 수십 억원에 인수한 기업을 사주 법인이 내부거래로 키워주고 수백 억원에 재인수
  - 자녀법인에 알짜 거래처를 떼어주어 매출이 1년 만에 수십 배 급증
  - 자녀법인에 원재료를 저가 공급하여 영업이익률이 3년 만에 15배 상승
- ② [기타 부당 내부거래 등] 경제적 합리성 없는 부당 내부거래로 기업이익 유출
  - 선입금한 배달대행료를 라이더에게는 미정산하면서 사업체 인수 명목으로 법인 자금 유출
  -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독점권을 특정 업체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는 신고 누락
  - 대형 플랫폼 기업이 기업 이익을 조작하여 모법인에 이익 분여

**[유형 3] 회장님은 '투자의 신', 알고 보니 정보 독점 : 7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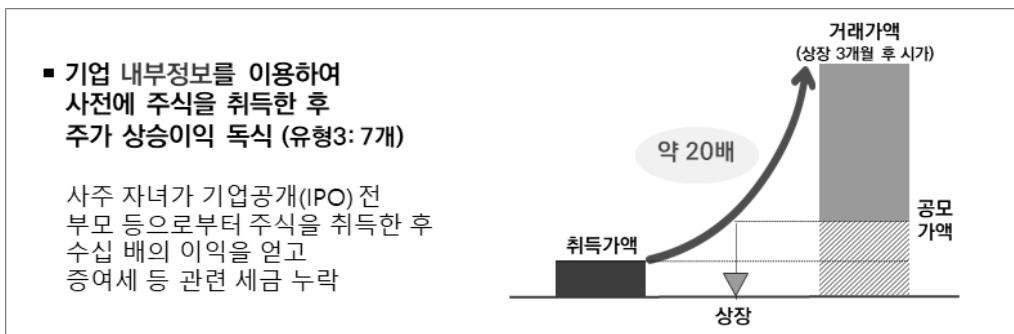
- 세 번째 대상은 기업공개(IPO), 신규 사업 진출 등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시세차익을 얻은 기업 및 사주일가입니다.

\* 미공개 중요 정보 : 투자유치·제3자배정 유상증자, 무상증자, 자기주식 취득, M&A 성사, 대규모 수출계약 체결, 우회상장 정보 등(대법원 2007도9769 판결 등)

- 이들은 일반「소액투자자」등 서민과 함께 향유해야할 주식 가치 상승의 과실을 독점하면서도 관련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최대주주인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이 5년 내 상장하여 주가 상승 이익을 얻은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 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 이번 조사대상 기업의 사주일가는 상장, 인수·합병 등이 예정된 비상장 주식을 취득하여 취득가액 대비 평균 20배의 주가 상승 이익을 얻었습니다.

**Ⅰ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 주요 탈세 사례 Ⅰ**

- ① [미공개 상장 정보 이용] 사주 자녀가 미공개 상장 정보로 부당이득
- 사주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상장예정 주식을 취득하고, 상장 후 주가 약 70배 상승
  - 사주 자녀가 사주로부터 상장예정 주식을 증여받아 상장 후 주가 약 20배 상승
- ② [호재성 기업 정보 이용] 미공개 경영 정보를 이용하여 관련 이익 독식
- 사주가 해외 수주 공시 전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공시 후 양도하여 수십 억원 시세차익
  - 사주가 비공개 매각 협상 중인 주식 일부를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여 시세 차익 분여

### 3 향후 추진방향

-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민생 경제 안정을 저해하고,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사주일가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 그 간 수집된 대내외 정보자료, 금융추적·디지털 포렌식 등 가용한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 아울러, 이번 조사 이후에도 소비자, 소상공인·중소기업, 소액투자자 등 서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사주일가의 불공정 행태에 대해서는 상시 예의주시하고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정 경쟁 및 사회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엄정하게 조사하여 민생경제 안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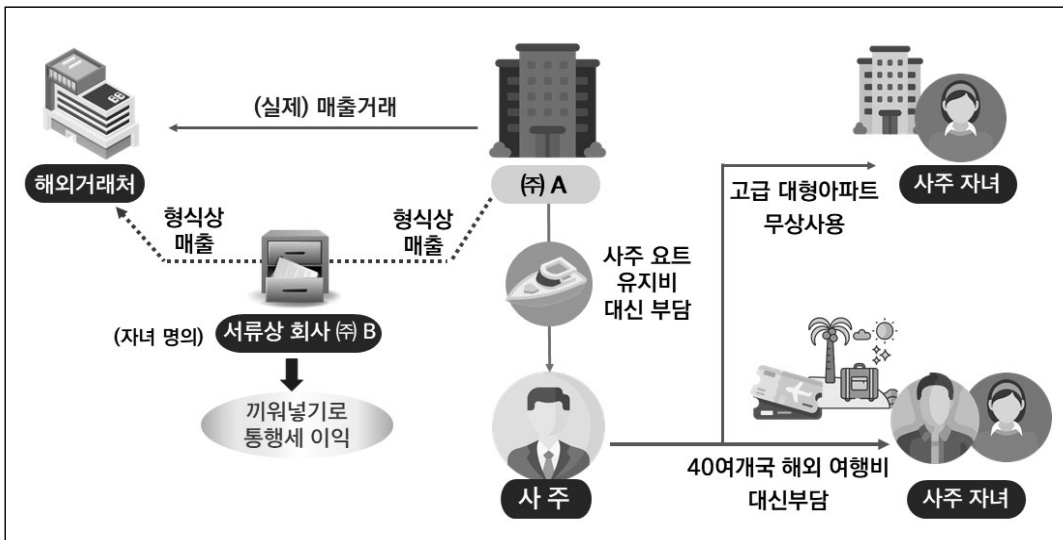


## 붙임 주요 사례

### 사례①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사용)

사주 개인 명의 요트의 유지비를 법인 자금으로 부담하고 자녀 명의  
페이퍼컴퍼니에 통행세 이익을 제공

#### □ 주요 혐의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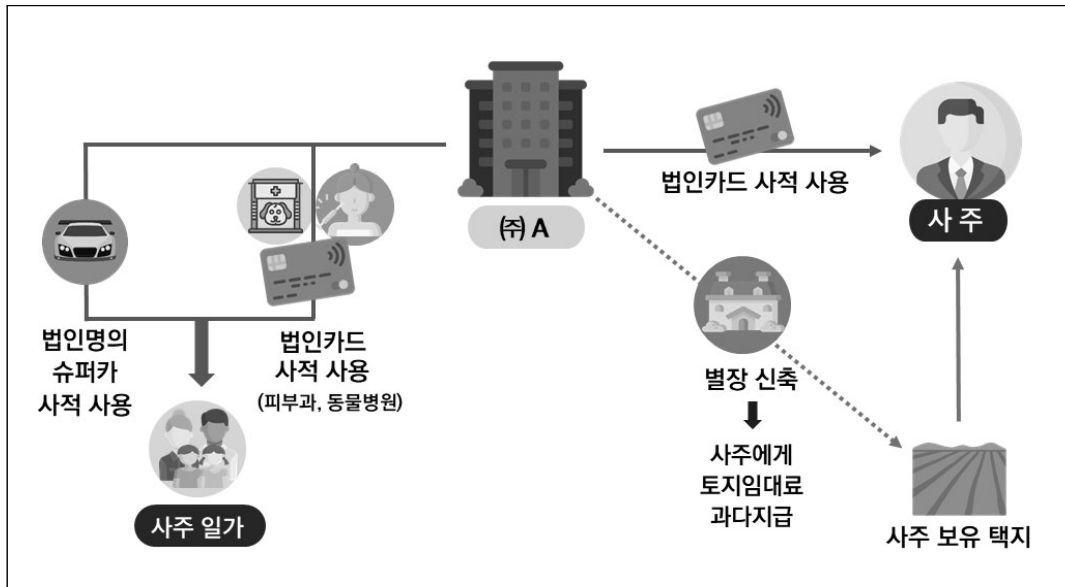
- (주)A는 제조 및 수출업을 영위하는 내국 법인으로,
  - 사주는 해외 휴양지에 있는 개인 소유 요트 유지비 수 억원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게 하고, 해외 고급 호텔·레스토랑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
- 또한, (주)A 사업장과 같은 주소에 자녀 명의로 서류상 회사 (주)B를 설립한 뒤
  - 실제로는 (주)A가 직접 수출거래를 하면서, 외관상으로는 (주)B를 통해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주)B에게 수십 억원의 부담 이익 제공
- 이외에도, 자녀에게 시가 40억원 상당의 대형 아파트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 40여개국에 이르는 자녀의 해외 여행 시, 수십 억원에 달하는 여행 경비를 부모 명의 카드로 결제하고도 증여세는 미신고

#### □ 조사 방향

- 사주의 호화생활 사적 경비 대신 부담, 사주 자녀에게 통행세 이익제공 등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사

<p><b>사 례②</b>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사용)</p>	<p>플랫폼 노동자에게 지급할 정산대금을 빼돌려, 기업 명의로 슈퍼카·개 인 별장 등 구입하며 호화 생활</p>
---	--

□ 주요 혐의내용



- 플랫폼 운영업체 (주)A는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대금 정산은 수시로 지연하면서도,
  - 그 사주일가는 법인 명의로 슈퍼카 여러 대를 구입하여 몰고 다니며, 수억 원대 피부 관리비·반려동물 비용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
- 또한, 사주는 본인 명의 토지에 회사 연수원을 짓는 것으로 위장하여 회사 돈으로 개인 별장을 지어 놓고도,
  - 토지 사용료 명목으로 법인으로부터 수 억원을 수령하며 호화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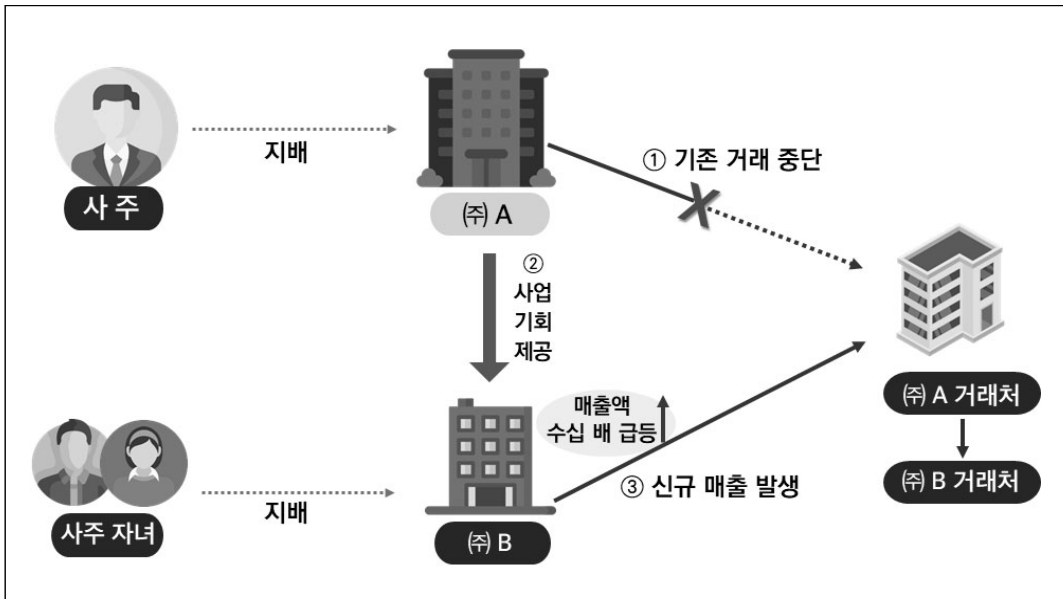
□ 조사 방향

- 호화 생활 유지비용 등 유출된 기업 자금 사용처 및 실질 귀속자를 밝혀 법인세·소득세 등 관련 세금 추징



<b>사 례③</b> <b>(알짜 일감</b> <b>몰아주기)</b>	<b>적자 상태인 자녀 소유 법인에 주요 거래처를 공짜로 떼어주어 이익을</b> <b>몰아주고, 관련 증여세는 무신고</b>
--	--

□ 주요 혐의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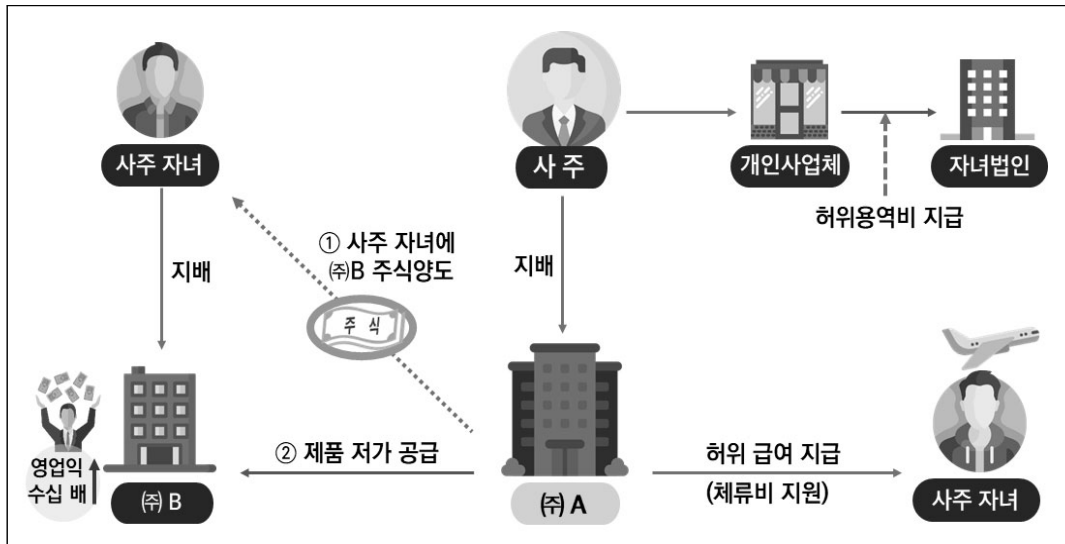
-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A는 사주 자녀가 대주주인 누적 적자 상태의 법인 (주)B에 주요 거래처(사업기회) 여러 개를 떼어주어, (주)B사는 단 1년만에 매출액이 수십 배 급증
  - 이로 인해, 사주의 자녀들은 (주)B사의 주주로서 수십 억원의 이익을 누리고도 세법에서 정한 증여세는 무신고
- 이 외에도, 자녀 법인 (주)B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주)A가 대신 부담하거나 사업장을 저가로 임대하는 방법으로 부담 지원

□ 조사 방향

- 사주 자녀 법인에 일감 떼어주기를 통한 우회 증여 및 자녀 법인 편법 지원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

<p><b>사 례④</b> (알짜 일감 몰아주기)</p>	<p>사주 자녀에게 자회사 경영권 양도 후, 자녀 회사에 제품을 저가 공급 하여 영업이익의 수십 배 증가</p>
---	--

□ 주요 혐의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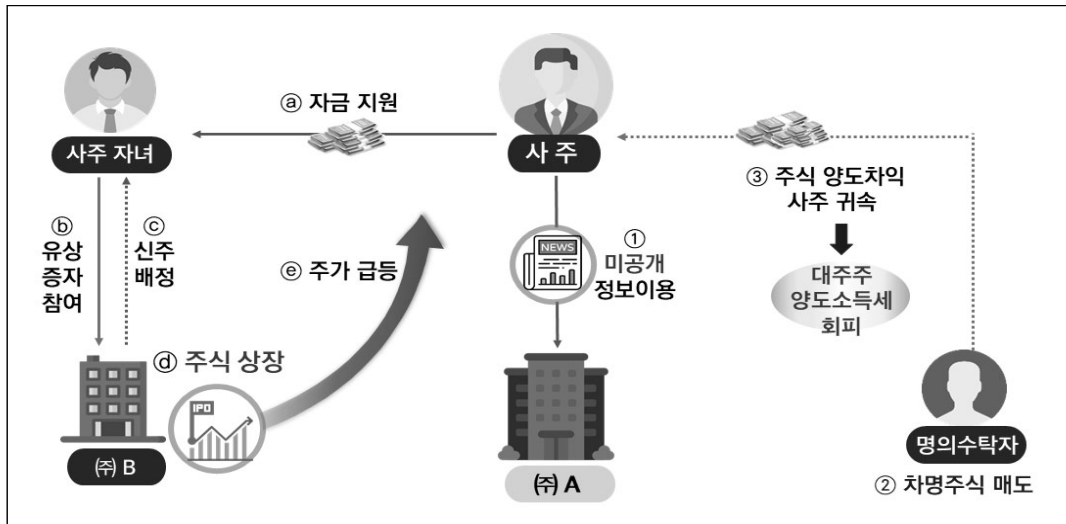
-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A는 설립한 지 1년도 안 되는 자회사 (주)B의 지분 전부를 사주 자녀에게 양도한 후,
  - (주)B에 제품을 저가로 공급하여 (주)B의 영업이익을 3년 만에 수십 배 증가시키며 사주 자녀에게 이익을 분여
- 또한, 사주는 자녀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로부터 건물관리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가장하며 용역비를 허위 지급하고,
  - 해외 거주하며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편법적으로 체류비 지원

□ 조사 방향

-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자녀회사 지원, 허위 비용을 계상하며 법인 자금 유출 등 엄정 조사

<b>사 례⑤</b> <b>(미공개 정보로</b> <b>부당이익)</b>	<b>사주 자녀는 미공개 상장 정보로 상장 차익을 누리고, 사주는 대형 수</b> <b>주 정보로 주가 상승 이익 독식</b>
--	---

□ 주요 혐의내용



- 제조업체 (주)A의 사주는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상장 추진 중인 계열사 (주)B의 주식을 취득하게 한 뒤,
  - 해당 계열사를 상장시켜 자녀에게 막대한 주가 상승 이익(취득가액 대비 수십 배)을 얻게 하였고,
- 또한, 사주 본인은 대규모 수주 계약 체결이라는 (주)A사의 호재성 정보를 이용하여 제3자 명의를 빌려 주식을 취득한 뒤, 양도 후 시세차익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대주주가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최대 30%) 등을 회피
- 이 외에도 사주가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비용 및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척에게 지급한 급여를 회사 비용으로 계상

□ 조사 방향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상장 이익 등 사주일가의 불공정 자산 증식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

# 비상장회사의 증권 매출과 관련한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 2024.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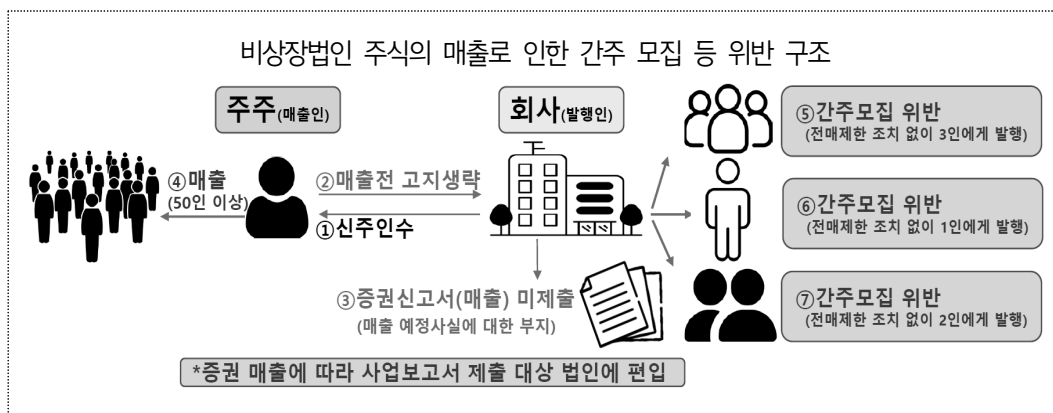
## I. 배경

- 비상장회사(발행인)라도 기존에 발행된 증권이 주주에 의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각될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모(매출)에 해당하므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 매출에 대해서는 증권시장(유가, 코스닥, 코넥스)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밖(장외거래, K-OTC 등)에서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그 수를 산출

- 주주도 매출 전에 회사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도록 매출 계획을 회사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 주주는 증권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회사(발행인)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을 50인 이상에게 매도하는 경우 발행인과 주주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



- 최근 공시위반 조사 과정에서, 비상장회사의 주주가 기존에 보유하던 회사의 증권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각하면서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아 회사가 ①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함은 물론,

- 후속적으로 ②간주모집 규제\*와 ③정기공시(사업보고서 등) 규제\*\*를 위반하게 되

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과징금 등 행정제재 및 검찰 통보 등 조치를 수행하였습니다.

\* 과거에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증권의 청약 권유 대상자가 50인 미만이라도 모집으로 간주되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2)

\*\* 주권상장법인, 모집·매출(10억원 이상) 실적이 있는 법인, 증권의 소유자 수 500인 이상 법인 등은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 제출 의무

- ▶ 따라서 공시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발행인·매출인·투자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시제도 운영을 위해 비상장회사의 증권 매출과 관련한 위반 현황과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 II. 위반 현황

### 1 위반 원인 분석

#### □ 발행인의 위반 경위

- (매출사실 부지) 주로 Pre-IPO 단계에서 투자조합, 벤처캐피탈, 신기술사업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행된 주식의 사후에 일반투자자에게 매출되었으나, 매출인이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음에 따라 동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 (후속적 간주모집 위반) 회사는 매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 이후의 증권발행을 사모(간주모집 미해당)로 판단하여, 증권 발행시 전매제한 조치를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 □ 매출인의 위반 경위

- (매출 관련 법규 부지)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매출) 제출의무는 발행인이 부담하나, 발행인의 신고서 미제출 시 매출인도 법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법상 의무를 간과하였습니다.

### 2 주요 위반 및 투자자 피해 사례

-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및 간주모집 위반) 비상장회사(자산 110억원) 甲은 주주 A가 甲주식을 55인에게 매각하면서 이를 甲에게 알리지 않아 매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증권(매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 甲은 주주 A의 매출로 간주모집 규제를 적용받게 되어 그 후 추가로 발행하는 증권에 대하여 전매제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 증권을 50인 미만으로 발행하는 경우 사모 발행으로 오인한 결과, 69억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간주모집 규제를 2회 위반
- [위반결과] 발행인(甲)에게 과징금 9,000만원, 매출인(A)에게 과징금 2,140만원

- (매출인 증권신고서 위반) 투자자 B는 소규모 비상장회사(자산 159억원) 乙과 신주인수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미 乙주식 인수 이후 매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에도 이를 乙에 알리지 않음
- 투자자 B는 乙주식 인수 이후 매출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신고서 제출 의무는 법상 乙이 부담하므로 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책임도 乙만 부담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538인에게 乙주식을 매각
- [위반결과] 매출인(B)에게 과징금 4,060만원

- (투자자 손실) IPO를 준비하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에 투자하길 희망하는 일반투자자 C\*는 비상장회사 丙의 주주 D(매출인)의 제안으로 D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인수(주당 7,900원)하였으나,
- \* 丙의 주주 D는 C를 포함하여 총 121인에게 주식을 매출
  - 丙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IPO계획 등 회사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음
- 투자자(C)가 丙주식에 투자한 후 6년이 지나고 나서야 상장하였고, 상장 후 주가는 인수가격에 미달하는 등 오랜 기간동안 투자손실

### III. 회사(발행인)·매출인·투자자 유의사항

- (회사, 발행인) 신규주식 발행 전에 주주명부를 확인함으로써 기존 주주에 의한 매출 발생 가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명의개서 대리인 등에 요청하여 주주명부를 확인한 결과, 주주 수가 큰 폭으로 변동했을 시 매출 발생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간주모집 규제 등 후속적인 공시위무위반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와 같은 확인 과정을 소홀히 한 결과 후속적인 공시위반으로 이어질 경우, 위반 수준이 중대해지고(과징금 상향), 평판 저하, IPO 일정 지연 등에 따라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매출인) 신고서가 미제출 된 상황에서 매출을 단행할 경우, 매출인에 대해서도 매출 금액의 3%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발행인이 작성한 증권신고서가 아닌 매출인이 사실과 다른 투자정보로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계속적·반복적으로 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 \* 부정거래(자본시장법 §176)나 무인가 투자매매업(§11)에 해당할 소지
  - 따라서 매출인은 매출 전 회사에 이를 알리는 등 신고서 제출 의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회사와 상호 협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 (투자자)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투자자는, 만일 당해 주식 양수가 매출에 해당하면 회사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므로 회사에 이에 대해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가 제출될 경우, 투자자는 투자 판단에 유익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증권신고서의 거짓 기재·누락에 대하여 회사·매출인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법 §125①).